

# 서울시정관련 연구동향

## 독일 고용률 73% 달성의 비결: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총 고용규모를 늘리는 마중물로 역할

현대경제연구원 | 한국경제주평 | 2013.7.22

<http://www.hri.co.kr/storage/newReList.asp>

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 실시, 시간제 일자리로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보완과 기업 인센티브 강화, 노사정 대타협, 공공고용서비스의 실효성 제고

- 배경
  - 독일의 고용률은 경기둔화와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용개혁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로 2004년 64.3%에서 2012년 72.8%로 지속 상승
- 고용률 개선의 비결
  - ‘실업자 수 감축’을 목표로 경기변동에 따른 다이나믹 고용정책 실시
  - 시간제 일자리에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총 고용규모가 확대되는 고용 선순환 구조 형성
  - ‘임금인상’보다는 ‘고용보장’을 우선시하는 패러다임으로 노사 간 협력 강화
  - 연방노동청의 적극적인 실업자관리, 일자리 매칭 등 공공서비스 강화로 재취업·재교육이 용이
- 시사점
  - 경기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을 미리 수립하고 대처하는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
  - 총 고용규모를 늘리는데 기여하는 시간제 일자리로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보완과 기업 인센티브 강화
  -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률 향상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
  -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들이 고용시장에서 완전히 이탈되지 않도록 ‘적극적 일자리 매칭’, ‘표준화·세분화된 직업 재교육’ 등 공공고용서비스의 실효성 제고

#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: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늘리는데 초점 맞춰야

현대경제연구원 | 한국경제주평 | 2013. 7.8

<http://www.hri.co.kr/storage/newReList.asp>

##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근로자 흡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새로운 직무형태를 전 업종에서 개발

- 배경
  - 정부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창출해 고용률 70%를 달성할 계획
  - 정규직 대비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2006년 62.3%에서 2012년 50.7%로 급락
-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는 배경
  - 저부가가치 산업 및 소규모사업체에서 시간제 일자리 비중 급상승
  - 취업애로계층에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 급증
  -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단구조 고착화로 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의 격차 심화
  -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질 낮은 시간제나 전일제 비정규직보다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
- 시사점
  -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근로자를 흡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대책이 필요
  -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새로운 직무형태를 전 업종에서 개발
  - 민간기업의 노동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시간제 근로보호법을 점진적으로 시행
  -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행

# 지역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

산업연구원 | ISSUE PAPER | 2013.4.26

[http://www.kiet.re.kr/kiet\\_web/main.jsp?sub\\_num=8&ord=0&pageNo=2&state=view&idx=42287](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main.jsp?sub_num=8&ord=0&pageNo=2&state=view&idx=42287)

## 지역산업을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및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, 지식서비스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, 지역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선순환 공급체계 형성

- 지역산업의 고용구조 동향
  - 2000년대 들어 지역 간 성장률 격차는 제조업의 지역 간 성장률 격차 확대에 기인
  - 취업자 증가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상대적 고임금의 대기업의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
  - 제조업의 일자리는 비수도권에서, 지식서비스업의 일자리는 수도권에서 주로 증가
-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전략
  - 지역산업을 고용친화적 산업구조로 개편
    - 현수준의 제조업 고용비중 유지 및 소재·부품 부문 강소기업 육성
    - 제조업의 생산구조 다변화와 지역의 소재·부품 및 뿌리산업 육성
  - 지역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
    - 제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
    - 융복합형 지식서비스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강화
  - 지역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선순환 공급체계 형성
    - 지역의 대학을 산학협력의 중심거점으로 육성
    - 지역의 특화된 전문기술개발기관 육성
  -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
    - 지역산업정책 목표를 지역산업생태계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전환
    - 지역의 일자리 창출형 지원사업 적극 추진
    -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정책에서 지역의 주도성과 책임성 확립
  - 사회적기업 육성 등 비시장적 방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
    - 지역 고용할당제와 지역 고용협약제도 도입

# 표준에서 협력하고 적용에서 경쟁하는 독일의 '사회적 혁신'

LG 경제연구원 | LGERI 리포트 | 2013.7.10

<http://www.lgeri.com/management/general/article.asp?grouping=01020500&seq=533&srctype=0&srchword=>

## 독일은 '사회적 시장경제'의 전통을 바탕으로 '사회적 혁신' 전략 구사

### 독일 제조업은 완제품업체들과 부품업체들이 대등한 관계로 경쟁과 협조의 장 구축

- 배경
  - 독일은 '사회적 시장경제'의 전통을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하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'사회적 혁신' 전략을 구사
- 독일의 협력과 경쟁 사례
  - 자동차산업은 AUTOSAR(독일자동차 전장(電裝)표준)를 통해 완성차와 부품사간의 협력과 경쟁의 장 마련
  - 주방·가전산업은 완제품업체들과 부품·소재업체들이 협력·공조·경쟁을 통해 혁신을 일궈내며 부품업체에서 시작된 기술혁신은 주방·가전·조리부문으로까지 이어지며 시장 확산
  -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정부와 업계의 협력과 경쟁으로 해당 사업부문의 조기시장화와 세계시장 선점 가능성 제고
  - 이종산업간 협력사례로 유통업체 알디는 중소제조업체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유통혁신을 이루고 중소제조업체들에게는 전세계로 향하는 판로를 제공하는 공생의 장 구축
- 시사점
  -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기업간, 산업내, 이종산업간, 국가와 산업간 협력
  - 독일의 사회경제 주체간의 협력은 수직적 협력이라기보다는 수평적 협력의 모습
  - 로컬 제조업체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박람회나 지역차원의 인적, 물적 교류
  - 개발이나 시장화단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조정능력과 산업계의 협조
  - 독일정부나 지방정부는 미래 유망산업의 시장화가 부진한 시기에 이종산업간의 협력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시장화유도

#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 완화, 취약계층 빈곤율은 증가

LG 경제연구원 | LGERI 리포트 | 2013.6.19

<http://www.lgeri.com/economy/domestic/article.asp?grouping=01010100&seq=943&srctype=0&srchword=>

##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정부기능 및 조세누진성 강화

### 경제적취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수혜금 강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대책 확대

- 배경
  -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빠르게 확대
  -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완화는 고소득층의 소득둔화가 주요 원인
- 우리나라 취약계층 내 소득격차
  - 연령별로 볼 때 소득격차가 가장 큰 계층은 고령층
  - 자영업의 경쟁심화로 자영업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확대
  - 전체 여성가구의 비중은 20% 수준이나 빈곤자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%를 상회
- 시사점
  -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정부기능 강화
  - 조세측면에서 과도하게 역진적 성격이 강한 세금환급 제도를 정비하고 조세누진성 강화
  - 경제적취약자를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사회수혜금 부분 강화
  - 고령층 및 여성가구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
  - 근로능력이 없는 가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

#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: 차주단위 자료를 중심으로

한국개발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2.12.20

[http://www.kdi.re.kr/report/report\\_class\\_etc.jsp?pub\\_no=12709](http://www.kdi.re.kr/report/report_class_etc.jsp?pub_no=12709)

## 가계부채의 부실축소를 위해서 중·장기적으로는 부채의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위험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 차주와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

- 배경
  - 한국의 개인부문 부채는 2012년 1/4분기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164.2%
 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부실위험성 고조
- 분석 결과
  - 다수의 비은행권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감독 사각의 축소 필요
  - 신용등급별로는 7등급의 부실위험 관리와 부채조정방안 마련이 시급
  -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채무자의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연령층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성 측면의 대응과 더불어 일자리대책의 병행이 필요
  - 대출업권별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가 필요
- 시사점
  - 가계부문의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중·장기적인 부채구조조정 노력과 더불어 단기적인 부실위험 관리에 주력
  - 부채조정을 단기간에 달성하려다 보면 부채축소의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중·장기적인 시계(time horizon)하에서 지속적인 부채조정 노력이 바람직
  - 가계부채의 부실의 현실화가 이 취약 차주와 금융기관에서 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단기적인 위험관리에 주력

# 보육정책의 목표와 설계

한국개발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2.12.31

[http://www.kdi.re.kr/report/report\\_class\\_etc.jsp?pub\\_no=12702](http://www.kdi.re.kr/report/report_class_etc.jsp?pub_no=12702)

## 여성의 근로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유아 보육료의 차별 지원

## 어린이집의 정보공개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 후 양적 규제 철폐

- 보육정책의 문제점
  -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육비 경감에 치중
  - 가구소득 및 여성의 근로여부와 무관한 획일적 지원
  - 양육수당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 미흡
  - 아동수당 도입의 실효성 부족
  - 품질정보 부족에 따른 시설 간 경쟁기반 취약
  - 양적규제로 인한 시설 간 경쟁 제한
- 개선방안
  - 가구소득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차등 지원하고, 여성의 근로여부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되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달리 설정
  - 영아의 경우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일치시키되 미취업 또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이 소득에 따라 받는 시간제 보육료 지원금과 양육수당 간의 균형 도모
  - 어린이집의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 도모
  - 보육품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후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양적 규제 철폐
- ‘2013년 보육정책 개편안’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 제안
  - 유아의 보육료는 여성의 근로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차별 지원
  - 아이돌보미와 보육료 지원방식의 연계를 통해 개별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의 수요 충족
  -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이 교사의 생산성과 더불어 근무여건 및 임금을 자발적으로 향상 하도록 유도

#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 및 정책방향 연구

국토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2.12.31

[http://www.krihs.re.kr/html/2\\_paperInfo/report\\_read.asp?id=3596993&page=2&search\\_kind=0&search\\_text=&search\\_text1=&r\\_kind=4&start\\_year=0&end\\_year=0](http://www.krihs.re.kr/html/2_paperInfo/report_read.asp?id=3596993&page=2&search_kind=0&search_text=&search_text1=&r_kind=4&start_year=0&end_year=0)

하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새로운 하천가치와 하천문화 창출, 하천과 주변지역 자원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, 건전한 하천이용 활성화, 하천관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활성화

- 배경
  - 현재의 하천정책은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정비사업 위주로 추진
  - 기존 생태·환경에 중점을 둔 패러다임이 인간의 행복추구 및 자연과의 조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
  - 하천과 관련된 자연적·사회적·정책적 여건의 변화
- 정책제안
  - 기존 하천기능을 강화하면서 하천과 주변지역의 환경요소를 토대로 새로운 하천가치 창출
  - 하천과 주변지역 자원의 연계활용과 관련법규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  - 하천 주변지역의 새로운 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과 하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하천문화 창출을 지원·유도
  - 안전·편리·소통·다양·쾌적성에 중점을 둔 시설과 수단을 확충하여 건전한 하천이용 활성화
  - 주체별 역할분담과 갈등조정방안 등을 마련하여 하천관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활성화

※ 본 자료는 연구 활동 및 시정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.

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간자료팀  
email: [urbandata@si.re.kr](mailto:urbandata@si.re.kr)  
phone: 02-2149-1022